

野 “쌍특검 28일 처리”... 與 “대통령 거부권 건의”

을 마지막 본회의... ‘김건희 추가조작·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격돌 국힘 ‘제 식구 감싸기’ 프레임 부담...한동훈 비대위원장 행보에 관심

여야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추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클럽 의혹’ 특별검사 도입 관련 법을 두고 올해 마지막 격돌을 펼친다.

더불어민주당은 쌍특검이라고 명명한 이들 두 법안의 본회의 강행 처리를, 국민의힘은 결사 저지를 각각 예고한 상황이다. 정국은 다시 극한 대치 상황으로 치달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들 특검에 대해 ‘절대 불가’ 방침에 변함이 없다.

전임 정부 검찰이 오랜 기간 수사를 벌였음에도 문제가 없던 사안을 총선을 앞두고 꺼내 들었다고 판단한다. 굳이 총선 정국에 맞춰 대통령 배우자를 정면으로 공격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것

이다. 현 지도부는 야당이 단독 처리하더라도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가 필수라고 본다.

이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대통령실 관계자는 25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김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조건부 수용안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조건부 수용안은 말이 안 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여당을 특검 추천권에서 배제하고, 수사 상황을 언론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한다. 특검이 진행되면 총선 전까지 김 여사 수사 내용이 수시로 생중계돼 선거에 상당한 악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기자들

과 만나 “총선 민심 교란용 악법인데 그걸 어떻게 받을 수 있냐”라고 말했다.

다만, 특검 거부로 ‘제 식구 감싸기’나 ‘내로남불’ 프레임에 여론 전체가 걸려들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당이 비대위 출범 후에도 ‘수직적 당정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자가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관심이 쏠린다.

한 지명자는 지난 19일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법 앞에는 예외가 없다”면서도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한 지명자가 야당에 수사 상황 공개 등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한편 특검 실시 시점을 총선 이후로 미루는 조건부 수용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연일 여권을 향해 김 여사 특검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

박성준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에서 “김건희 여사는 성역이 아니다. 대통령 부인도 법 앞에 예외일 수는 없다”며 “땀땀하고 죄가 없다면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실 김 여사 특검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취하는 것을 겨냥해 “범죄를 저지르면 대통령도 수사받는 것이 대한민국의 상식이며, 대통령 부인은 더더욱 예외일 수 없다”면서 “김 여사는 왜 법 앞에서 예외냐. 김 여사는 성역이고 역린을 건드리는 것이니 특검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는 것이냐”라고 따졌다. 이어 “추가 조작부터 땅 투기까지 의혹이 차고 넘쳐나는데 어떤 수사도 거부하겠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라며 “국민 다수는 ‘김건희 특검’을 요구하는데 대통령은 무슨 근거로 절대 불가를 주장하느냐”고 반문했다.

결국 이들 법안은 180일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이 지나면서 지난 10월 24일 본회의에 부의됐다. 본회

의 부의로부터 60일이 지난 시점까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만큼 28일 본회의에서 표결해 의결할 수 있다.

민주당은 여당과 한 지명자가 특검 수용을 거부하거나 다시 대통령의 거부권 정국이 재연되면 방탄 프레임에 씌워 대대적인 공격에 나설 방침이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김건희 특검에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우세한데 윤 대통령이 과연 거부권을 행사하겠나”라며 “이를 거부하면 윤 대통령은 더는 공정과 상식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여야는 특검뿐 아니라 민주당이 28일 본회의의 처리 방침을 밝힌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두고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이 법안은 특별법은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 6월 3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고 지난달 29일 본회의에 부의됐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민주당이 지켰습니다!



민주당 최고위 개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특별법’ 특조위 놓고 평행선

與 “진상 규명위해 반드시 필요”...野 “정쟁 유발 목적 안돼”

여야가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둘러싸고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처리' 원칙을 강조하며 양측에 이점을 줄일 것을 주문하고 있지만, 여야 모두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문제를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지점으로 꼽고 있어 현재로서는 특별법의 쟁점을 합의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국민의힘은 특조위 구성이 정쟁 유발 목적이라

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관련 조항 삭제 등 나머지 내용은 수용하더라도 진상 규명을 위한 특조위 설치만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장이 지난 21일 이태원참사특별법과 관련해 특검 관련 조항을 없애고 법 시행을 내년 총선 이후로 미루는 내용의 중재안을 내놨으나 이후 여야 원내지도부 간 이렇다 할 협의는 없는 상태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김 의장 안(案)은 민주당 안이다. 민주당 안을 갖고 의장이 국민의힘에 여야 간 협의를 하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정치공세를 위한 특조위 구성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며, 거기에 들어갈 비용을 차라리 유가족들의 치유와 보상 등에 써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은 특별법에서 특조위를 없애자는 국민의힘 요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의장은 법안 처리 시한을 1월 9일 본회의까지 열어둔 것 같지만 우리는 연내에 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순천 코레일 광주본부’ 광주역 귀환

3년만에...광주·전남 서부권역 관할

순천에 통합 운영중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광주본부가 3년 만에 광주역으로 돌아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민주당·광주북구갑) 국회의원은 25일 “오는 26일부터 정부의 철도안전 강화 대책 일환으로 순천에서 통합 운영중인 코레일 광주·전남본부를 광주본부와 전남본부로 분리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광주본부는 광주와 전남 서부권역, 전남본부는 전남 동부권역을 관할하게 된다.

이번 분리 운영으로 현재 광주지역 관리단을 광주본부로 조정해 조직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순천에서 운영됐던 광주·전남본부 산하 광주지역 관리단은 3처(안전보건처·시설처·전기처), 1부(운영지원부)로 36명이었다. 이번에 복원되는 광주본부는 6처(안전보건처·경영인사처·영업처·차량처·시설처·전기처), 총 69명으로 확대

된다.

코레일은 지난 2020년 9월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손실 등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광주와 전남본부를 광주·전남본부로 통합하고 순천에서 운영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하지만 이후 비상 상황 발생 시 출동 시간 추가 소요, 인근 분부와 관리단 간의 업무 협조 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조 의원은 광주지역 관리단을 광주본부로 변경해 안전 책임을 강화하고 사고 복구 지휘 체계 단일화를 요구해 왔다.

조 의원은 “광주역에는 KTX 진입, 광주역-송정역 간 도심철도 지하화, 달빛철도, 경전선 복선 전철화 등 미래 철도 수요를 관리할 컨트를 타워가 시급했다”며 “철도 부지 등에 추진 중인 국가혁신지구, 그린스타트업 타운, 사회적 경제혁신 타운 등 다양한 국책 사업의 원활한 협조 체계를 위해서도 광주본부 복원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정세균·김부겸 “민주당 분열 막아야”

전 총리들 조찬 회동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김부겸 전 총리가 조찬 회동을 갖고 최근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공천 잡음과 관련해 우려를 공유했다.

이들은 지난 24일 만나 총선 공천 경선 문제에 대한 당내 잡음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그동안 우려한 대로 (공천을 두고) 일이 발생하니 큰 염려가 된다”며 “이런 문제가 축적되면 결국 문제를 제기하는 그룹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두 전 총리는 이날 회동에서 최근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을 공식화한 데 대해서도 우려

를 나누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내에서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움직임에 ‘사쿠라’라며 원색적으로 공격하고 신당 반대 연판장이 도는 상황을 두고 “이 전 대표는 당의 원로인데 과도한 인사로 공격해선 안 된다”는 인식을 나눴다고 한다.

이들은 또 “당의 통합에 대해 힘을 모아야 하고 이재명 대표가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만 현 상황에 진전이 있다”는 취지로 대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문재인 정부 ‘3총리’(이낙연·정세균·김부겸) 회동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 관계자는 언론과 전화에서 “두 전 총리가 ‘전 대표를 만나 설득할 수 있다, 앞으로 상황을 보자’는 원론적 이야기만 오갔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이겠습니다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

보험사기 ZERO

-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